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음 7월 4일) 제210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전북도 환경녹지국 공고 1967년 지정 후 51년만에

전북도 환경녹지국은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8월 10일자로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면적은 '전주전미취수장일대'로 전주시 전미동(16만1,597㎡)과 완주군 삼례읍 하리(16만7,739㎡), 총 32만9,336㎡이 해당된다. 전미취수장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한 1967년 8월 5일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 1989년 9월부터는 생활용수 공급이 중단, 그 해 12월부터 전주 팔복동 공단에 공업용수만을 공급해 오고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수도사업 폐지인가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전주시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2018년 2월 8일자로 도에 요청하게 됐다.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의 타당성 검토와 전주시 완주군 주민의견 공람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하게 됐다. 상수원관리규칙(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업용수만 공급하는 취수시설은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가 가능하며, 전미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대부분이 하천과 제방부지인 관계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나 오염부하량 증가가 없어 해제하여도 공업용수 수질기준 3등급을 충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에서는 이번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2.10)에 해당 구역 토지의 지적을 고시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덕진연못, 국가 집중관리 받는다

환경부, 전주시에 지정 확정 통보 지자체 관리 저수지 중 최초 시, 내년 8월까지 개선 계획 수립

썩어가고 있는 전주 덕진연못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집중 관리를 받는다. 특히, 덕진연못 수질 개선을 통해 사람과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는 환경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덕진연못의 수질문제 해결을 건의한 결과 국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확정 통보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중점관리저수지는 오염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며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8월까지 덕진연못의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125억원 등 총 250억원을 배정하여 수질개선 관련 연계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덕진연못은 유입수원인 연화

천의 수질개선과 연못 내 퇴적토 준설 및 추가 유입수원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시는 생태하천복원과 하수관거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휴양형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전국 지자체 관리저수지 최초로 국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덕진연못을 되살리는 일은 수질 개선이 절대적 조건이다. 하지만 전주시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환경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모두가 부정적이었"이라며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정치권과 중앙부처 및 헌신적인 전주시 공무원들의 소통과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 덕진연못은 후백제 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주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의 대표관광지를 수놓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 125억원 등 총 250억원을 배정하여 수질개선 관련 연계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송희철 기자

익산시,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위해 14억4400만원 예산 추가 확보 오늘부터 신청접수 최대 1800만원까지 구매보조금 지급

익산시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약 80대분, 총 14억 4,4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57대의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13일)이전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기업, 사업자, 단체 등이며 접수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제조·판매사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

록 순으로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306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제조·판매사에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해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시의 노력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평화·경제·민생... 민주-호남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호남권 시도지사 예산정책협의회가 13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일 원내대변인,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홍영표 원내대표, 이춘서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예결위간사, 서삼석 예결위원 겸 전남도당위원장, 송갑석 예결위원 겸 광주시당위원장. (관련기사 2면)

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

고위급회담서 공동보도문 채택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에서 다음달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 수석대표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은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며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고 평가했다. 공동보도문은 그러면서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광복절 관계로 8월 15일자 신문 쉽니다.

"조계종 사찰 방재시스템 비리 의혹 철저 수사"

불교단체 강력 촉구 "자승 전 총무원장 공개 소환해야" 주장

불교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조계종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불교계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 전 총무원장을 소환하는 등 공개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그가 재임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집행했으며, 부패 의혹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계종에서 업체 선정과 시범 사업을 하면서 특혜 주기와 단기 부풀리기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원칙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라며 "직업 종교인과 검찰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계종은 과거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템플스테이 사업과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스님들의 배임과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현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비리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도박을 하거나 종교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스님이 있었다는 의혹 등이 일부 불교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검찰을 상대로 면담 신청서를 냈다. 또 17일과 18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면서 조계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

매일 INDEX
6면 ·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아연 맹공
16면 · 군산 우수 중소기업 지에스엠